

신년사설

깨어 있는 세상되길...

불기 2548년 새해에 독자님들께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올 갑신년은 현대불교신문이 10주년을 맞는 해여서 저희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1994년 10월 15일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으로 창간한지 10년.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신문' '꼭 만나고 싶은 친구 같은 신문'으로 자란 것은 독자 여러분의 전폭적 후원과 격려에 힘입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간 현대불교신문,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 불교 정보센터 '부다피아', 출판 및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쇼핑몰 '마하몰' 등으로 부처님 세계를 넓혀 온 저희들의 성장에 자부심 또한 감추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테러와 전쟁 등으로 점철된 지난해 지구촌의 슬픈 악몽과, 앞일이 불투명해 보이는 국내외 여건들이 올해도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10주년을 맞는 다짐을 새롭게 하려 합니다.

창간 때의 초심을 다시 가다듬어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이 세상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 평화로운 세계, 자연을 아끼는 삶,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저에 있는 '마음의 깨침'을 위한 지면을 꾸려가려 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이상은 평화입니다. 전쟁의 어리석음이 아직 인류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화를 향한 간담없는 전진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환경파괴와 자원의 낭비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인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동서로, 남북으로, 각종 이념으로 갈라져 반복하고 있는 이 땅의

깊은 상처에도 부처님 가르침은 좋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 마음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로 귀결 됩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인 마음을 도야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집단무의식을 교정하고, 상생의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에 전문 수행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0주년의 해에 우리들은 '깨어 있는 마음의 신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행히 근년 들어 시민사회 의식의 눈발만한 깨어남과 더불어 불교계의 사회문제에 대한 눈뜸과 참여가 활발합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알고 그 희망을 지면에 불러들여 합니다.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유머러스의 비판정신을 살려 불교교단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구습, 비리를 지적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환경, 희망, 마음의 깨우침을 위한 신문 지면을 이제 독자님들과 함께 꾸려가겠다는 마음다짐으로 독자 참여율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불자는 물론 불자 아닌 사람들도 친구처럼 함께 되는 신문을 만들겠다는 새삼스러운 다짐을 독자님들께 약속드리며 독자님들의 새해 꿈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의 10년 발전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독자님들의 계속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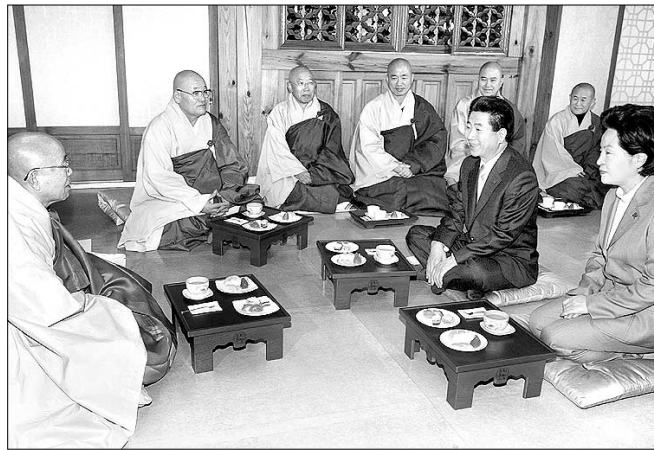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정부 "북한산 기존노선 공사 재개"

고건총리 회견 수행·자연환경 파괴 최소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해인사를 전격 방문,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게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재개'의 뜻을 전했다.

법전 스님, 노 대통령에 "국정 협조"

시민·사회·환경단체들 강력한 반발

천성산 관통도로 백지화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불교계 첫 번째 대선공약인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마저 휴지 조각이 됐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당초 노선대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립공원 환경피해 최소화 노력과 법과 제도 개선 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단체와 협의, 서울북부지역의 대기오염·사할 수행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환경영향 평가 시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 중시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22일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게 "공론 조사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법전 스님은 "대통령이 원할하게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의 녹색화라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에 8차선 고속도로를 허용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의 아합에 의해 죽음을 길을 떠나게 됐다"며 정부와 조계종을 강력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조계종에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부의 결정 단계에서 철저하지 소의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와 조계종이 일종의 답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관동저지운동에서 하나의 축으로 활동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마무리 과정에서 총무원과 자리 마련을 3번 이상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조계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9개 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노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과 관련 "도대체 누가 청와대와 협의해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그 전말을 밝혀야 한다"며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타내기 위해 거금 1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뿌린 파렴치한 사건과 1천억 원 규모의 동관 대장정 제작 사업

북한산 관통도로 일지

- 1996. 3. 2. 2만차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
- 2001. 10. 24. 관통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결의대회
- 2002. 2. 18. LG건설 회동사 비구니 스님 폭행
- 2002. 3. 5. 조계종, '환경수호를 위한 불교도 결의대회' 개최
- 2002. 7. 18.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3보 1배
- 2002. 7. 25. 월마선원 폭력배 난입
- 2002. 8. 14. 조계종 공대위·사공사 북한산 터널 노선 재검토 합의
- 2002. 12. 4.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북한산 관통도로 전면 백지화 공약 발표
- 2003. 4. 14. 조계종·정부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 2003. 6. 5.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 종료. 의정부 우회 4명, 북한산 우회 2명, 북한산 관통 5명으로 '우회' 의견 제시
- 2003. 12. 22. 노 대통령 해인사 방문
- 2003. 12. 24. 정부 기존 노선 강행 발표

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 해인사 총무소와 총무원은 해명해야 하고, 종정여하와 종도 앞에 깊이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불교계 뒤늦은 대응...이미지 손상 자초

북한산 뭘 남겼나

북한산 관통도로는 1996년 3월 2일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인 2001년에야 불교계가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나섰다. 즉 낙장 대응 이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교계는 이후 환경운동 입지뿐만 아니라 대사회 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은 "이후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조계종과 함께 하겠는가"라며 "조계종은 빠야만 반성과 함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 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건 총리는 1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원 환경피해와 사할 수행환경 피해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조계종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무산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국회 부결

1급청인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이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무산됐다.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은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이날 개정법률안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소방방재청 신설안으로, 방재청장의 정부직 임용 논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결됐다. 방재청장을 정부직

으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이 방재청장을 맡는 수정 동의안 모두 의결 정족수인 출석과 반수 찬성에 미달했다.

이처럼 개정법률안 부결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논의는 '일단 멈춤' 상태에 머물러 있어 개정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재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고홍길 의원(한나라당) 측은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문제는 이의가 없었던 만큼 행

정자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1월 9일까지인 이번 회기 내에 재상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정은 한두 부처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문제만으로는 개정법률안을 재 상정하기 어려울 다음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법에는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소방방재청 신설, 기획예산처 소관의 행정개혁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각각 행정부와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오유진 기자



佛紀2548년 謹賀新年



대한불교 원응종

종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산

원로위원 선명 효계 벽봉

- 중앙종회의의장 성관
- 중앙종회부의장 천호 인관
- 중앙비구니회회장 대월
- 중앙비구니회부회장 선덕
- 중앙종회의의원 법원 선덕 성욱 체의 불선 보선 체명 은혜 대천 혜민 진운

- 총무원장 법륜
- 총무부원장 선진
- 포교원장 체관
- 문화원장 정관

- 재무부장 대월
- 규정부장 석경
- 사업부장 체도
- 사회부장 풍원
- 사업국장 성해
- 사회국장 흥재

- 전국교구총무원
- 인천총무원장 법원
- 충남총무원장 체의
- 전남총무원장 진운
- 부산총무원장 대천
- 경남총무원장 은혜
- 경북총무원장 불선
- 대구총무원장 송월